

美 반도체 관세에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미국, 최대 100% 관세 부과 경고
구체적 사항 확인하고 적극 소통
앞선 대만 무역 합의내용 참고할 듯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정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

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

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 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이해훈 청문회 거부… 與 단독개최 고심

국힘 “결격 사유 차고 넘쳐… 보이콧”
청와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입장

여야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당이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도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의미다.

현재 이해훈 후보자는 확장 재정,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지지만, 본인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투기·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동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들이 나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이 후보자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안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간사 간 합의한 시한을 넘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가 2000건이 넘고 그중 15~20%(만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낸다 해도 볼 시간이 있어야 하니 내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터지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16일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버티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 개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점이 ‘단독 개최’ 강행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직에 앉아 대신 진행할 계획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장동혁 나흘째 단식… 한동훈 ‘사과 표명’

“자유와 법치 끝까지 지켜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정교유착·민주당 돈공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나흘째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로 인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가 나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

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단식 나흘째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단독 영수회담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와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법외국외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정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 표명이 나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격정을 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태홍 기자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홍익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우상호 현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예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의를 포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